

[별첨 2] 2023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서

목 차

<예비타당성조사>

■ 국토교통부	4
1.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	5
2.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6
3.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7
4.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10
■ 소방청	11
5.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법무부	16
6. 창원지검 마산지청 신축사업	17
■ 행안부	19
7.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	20
■ 관세청	22
8. 인천세관 청사 신축	23
■ 경찰청	25
9. 경기남부 안산단원 경찰서 신축	26
■ 환경부	28
10. 인천광역시 남부권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29

<예비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

1.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고속철도)		
② 총사업비 (국고)	6,843억원 (국고 : 3,421.5억원, 공단 : 3,421.5억원)	③ 사업기간	'25년 ~ '31년 (7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 기관		
⑤ 사업목적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직결선 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여객 수송체계 구축으로 서해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및 통행시간 단축		
⑥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신규 철도 서비스를 통한 철도수요 증가량 ○ 측정 산식 : 시행 시 철도수요 - 미시행 시 철도수요 ○ 측정 방법 : 미시행 시 대비 시행 시 철도수요 예측결과		
⑦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21. 7) ○ 사전절차 추진내용 : 사전타당성조사 시행('22. 3~'23. 3, 국토교통부)		
⑧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 ○ 사업물량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간 7.35km 복선전철(직결선)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착공		
⑩ 자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정액 지원 ○ 자원분담 : 국고/국가철도공단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50% ○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 철도영업수입		
⑪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 미정(향후 선정) ○ 운영방안 : 운영주체 선정 후 수립 예정		
⑫ 사전용역	○ 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 고속철도 증편을 통한 여객 수요 분담으로 도로 교통 정체 완화 ○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 개발 도모		

2.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5,965억원 (국고 : 6,612, 도공 : 9,353)	③ 사업기간	24년~34년 (11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도 공		
⑤ 사업목적	○ 국가간선도로망(10x10+6R ²) 남북2축 노선으로 광주외곽순환선 및 강진-광주선(공사중)과 연계한 전남 남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도모		
⑥ 성과지표	○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⑧ 사업규모	○ 사업내용 :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 사업물량 : 38.9km, 4차로 신설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12개월)→기본설계(14개월) →실시설계(14개월)→공사시행(신설 7년)		
⑩ 자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보조 (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 ○ 자원분담 : 국고 6,612억원, 도공 9,353억원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공사비 40%, 용지비 100% ○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 한국도로공사 운영(통행료)		
⑪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 한국도로공사 ○ 운영계획 :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		
⑫ 사전용역	○ 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 남북 2축 완성으로 전남 중남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 ○ 광주권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벨트의 배후교통망 확충 ○ 의료·문화·교육·체육·관광 등 시설 접근성 개선 ○ 남해안 태풍피해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재지원		

3.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② 총사업비 (국고)		2,798억원 (국고:765 지방비:2,033)	③ 사업기간 '23년~'32년 (10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의료지구, 연호지구, 민자도로 무료화('26년) 등 범안로 주변 대규모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혼잡 개선 ○ 대구-경산 간선축 보강 및 광역권 도로 이동성 확보 	
⑥ 성과지표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성과지표 설정 예정	
⑦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도로법」 제8조 <li style="padding-left: 20px;">-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1~'25)」 반영 ○ 사전절차 추진내용 :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대구광역시, '22.10.) 	
⑧ 사업규모		○ 사업물량 : 6차로 신설, B=30m, L=3.1km,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대구광역시	
⑩ 자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정액 지원 ○ 자원분담 : 국고, 지방비(도로법 제86조)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국고 50%, 지방비 50% ○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 해당없음 	
⑪ 사업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대구광역시 ○ 운영방안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및 수성구청 ○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대구광역시 재정지원 	

⑫ 사전용역	○ 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구벌대로 범안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연속류 도로 확보로 교통사고 감소 ○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와의 연결성 강화로 이동성 확보

4.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② 총사업비 (국고)	1,663억원 (국고 : 688 지방비 : 975)	③ 사업기간	23년~31년 (8년)
④ 추진주체	주관부처		
	지자체·기관		
⑤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IC와 천변고속화도로 한밭IC를 연결하는 남북축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 ○ 간선 기능의 도로망 확충을 통해 유등로 및 시가지 통과 대둔산로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권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 		
⑥ 성과지표	○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도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⑧ 사업규모	○ 사업물량 : L=7.54km, B=14.5~20.5m(4차로)		
⑨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주체 : 대전광역시(설계 및 시공) ○ 사업진행 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1년)→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5년) 		
⑩ 자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원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설계비·공사비 : 국고(50%), 지방비(50%) - 보상비 : 지방비(100) ○ 국고지원 비율 : 조사·설계비·공사비의 50% ○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⑪ 사업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대전광역시 ○ 운영방안 : 향후 계획 		

	○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준공 후 지방비 100% 투입
⑫ 사전용역	○ 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 간선기능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심권 교통혼잡 해소 ○ 주변 고속도로와 도심지로의 접근성·이동성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예비타당성조사>

소방청

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사업유형)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2,019억원 (국고: 1,054억원 / 지방비 965억원)	③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 (3단계 3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p>□ 전국 단위의 119신고 접수 및 국가 차원의 소방력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재난 총괄 대응을 위한 119 정보 체계 구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 목적</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재난 총괄대응을 위한 차세대 119 정보체계 구축</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차원 소방력 지원 업무 + 전국단위 긴급구조 정보체계</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th>사업 추진 방향</th></tr> <tr><td>① 국가재난 컨트롤타워</td></tr> <tr><td>사도 분절적 정보</td></tr> <tr><td>↓</td></tr> <tr><td>국가기반 관리 정보</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td>② 신고자 맞춤형 대응</td></tr> <tr><td>인구변화 대응력 한계</td></tr> <tr><td>↓</td></tr> <tr><td>지능화 기반 서비스</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td>③ 정보활용 범위 확대</td></tr> <tr><td>소방력 운용 한계</td></tr> <tr><td>↓</td></tr> <tr><td>상호운용성 기반 초광역 지령·관제</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td>④ 서비스 연속성 강화</td></tr> <tr><td>시스템 장애대응 한계</td></tr> <tr><td>↓</td></tr> <tr><td>소방 전용망 기반 119서비스 제공</td></tr> </table> </div> <p>○ 대국민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 대형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가 필요한 모든 신고가 119에 연결·접수되어, 최 인근의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강화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킴 - 각종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한 119 서비스를 지역 소방 중심에서 국가 소방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으로 서비스 수준 강화 - 국민이 찾아다니는 소방 민원을 시공간의 제약없는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및 발급 서비스로 국민 편의성(시간, 비용) 제고 <p>○ 업무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대응체계가 시·도 단위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 현장 대응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 지역별 분리된 시스템 및 데이터를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전국단위의 정보체계로 통합 구축으로 시·도 소방본부간 정보격차 해소 및 중복 투자 방지 			사업 추진 방향	①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사도 분절적 정보	↓	국가기반 관리 정보	② 신고자 맞춤형 대응	인구변화 대응력 한계	↓	지능화 기반 서비스	③ 정보활용 범위 확대	소방력 운용 한계	↓	상호운용성 기반 초광역 지령·관제	④ 서비스 연속성 강화	시스템 장애대응 한계	↓	소방 전용망 기반 119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 방향																				
①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사도 분절적 정보																				
↓																				
국가기반 관리 정보																				
② 신고자 맞춤형 대응																				
인구변화 대응력 한계																				
↓																				
지능화 기반 서비스																				
③ 정보활용 범위 확대																				
소방력 운용 한계																				
↓																				
상호운용성 기반 초광역 지령·관제																				
④ 서비스 연속성 강화																				
시스템 장애대응 한계																				
↓																				
소방 전용망 기반 119서비스 제공																				

⑥ 추진경위

□ 추진 배경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국민의 위급한 119 신고를 접수부터 출동, 대응 전반을 위한 핵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
- '06년 구축 후 16년 경과 등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빈번하고, 신규 서비스 도입에 큰 어려움이 있음
- 시·도 소방본부별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간 정보 서비스 수준 편차*가 심하고 비표준화 경향이 있어 개선이 시급
-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초광역화로 관할 시·도를 초월하는 국가차원의 소방력 지원 및 지휘를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고도화 필요

□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16조(소방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3조(구조·구급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제30조의 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국정과제

- 국정과제-[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 3.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⑤ 공공분야에 민간의 최신 AI기술 적극 활용
 - (재난/재해 먼저 찾아,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119 신고접수 플랫폼' 구축
- 국정과제-[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상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2018~202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 공공부문의 지능화 기반 구축) ▪ 제2차(2021년~2025년) 전자정부 기본계획(2. 데이터 행정 강화)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 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2023~2025) <p>□ 사전 절차 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및 유관 중앙부처 협의 ○ 자문 및 기술 구성 동향 관련 인터뷰
<p>⑦ 사업내용</p>	<p>□ 사업 목표 및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 대응체계 개선) 집중호우, 대형화재 등에 대한 지역기반 신고접수 및 출동 체계를 전국 119 접수 및 출동이 가능한 지능화 기반으로 개선 ○ (안정적 통합인프라 구축) 24시간 무중단 및 전국단위 소방 서비스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 ○ (대국민 서비스 제공) 소방 데이터 허브 및 대국민 119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소방행정 서비스를 <p>□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속하고 효과적인 119 출동 대응체계 구현 2. 클라우드 기반 안정적 통합인프라 마련 3.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 제공
<p>⑧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p>	<p>□ 사업수행주체 : 소방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도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추진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시·도 간 협력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 설계로 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유지보수 생산성 향상 • 차세대 119 시스템에 사용되는 코드, 데이터 등의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 워크 기반으로 설계 <p><input type="checkbox"/> 이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구축 기간: 3년 (2025년~2027년)
<p>⑨ 재원조달방식</p>	<p><input type="checkbox"/> 지원 형태 및 재원 분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형태 : 정액 지원 ○ 재원 분담율(구축비) : 국비 49%, 지방비 51% <p><input type="checkbox"/> 재원 분담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재정법 제21조에 의거, 국가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 할 수 있음
<p>⑩ 사전용역</p>	<p><input type="checkbox"/> 수행</p>
<p>⑪ 사업기대효과</p>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내부 비용 절감(재무) 효과) ○ (A-2. 내부 업무 품질 향상 효과) ○ (B-1. 국민 피해 저감 효과) ○ (B-2. 대 고객 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 향상 효과) ○ (B-3. 대 고객 서비스 범위 확대 효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법무부

6. 창원지검 마산지청 신축 사업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창원지검 마산지청 신축 사업(건축)		
② 총사업비 (국고)	687억원 (국고: 687억원)	③ 사업기간	'24년 ~ '28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기관		
⑤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할 지역 주민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고 		
⑥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명: ○ 측정 산식: ○ 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1조(예산 요구서의 제출) ○ 사전절차 추진내용 : 마산지원과 동시 개청 		
⑧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물량 : 부지 16,500㎡, 건물 연면적 13,112㎡ 		
⑨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주체 : 국가(법무부)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부지취득, 설계, 공사, 완공 		
⑩ 자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정액 지원 ○ 자원분담 : 국고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국고지원 		

⑪ 사업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법무부 ○ 운영계획 : 완공 후 창원지검 마산지청 청사로 활용하여 범죄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검찰청 업무 수행
⑫ 사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 해당 없음 ○ 조사기간 : 해당 없음 ○ 용역결과 : 해당 없음
⑬ 사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할 지역 주민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행정안전부

7.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공공청사)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공공청사)		
② 총사업비 (국고)	1,780억원 (국고 : 1,780억원)	③ 사업기간	'24년 ~ '29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 기관	해당사항 없음	
⑤ 사업목적	○ 대전지역에 산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청사 노후화(평균 경과연수 33년), 안전도(정밀안전진단 C등급), 사무공간 부족(협소도 34.8%), 외부임차 등 사유로 신축 이전이 필요한 8개 기관을 합동화하여 입주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		
⑥ 성과지표	○ 해당사항없음		
⑦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8조(청사의 합동화) -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전절차 추진내용 : -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23년 청사 수급관리계획안' 및 '23년 국유기금 공용재산취득 계획안' 제출		
⑧ 사업규모	○ 사업물량 : 대지 약 30,000㎡, 연면적 56,033㎡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계획수립 → 설계자 선정(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 시공사 선정 → 공사착공 → 준공		
⑩ 자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자원분담 : 국고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국유재산관리기금) ○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 정부대전청사 시설운영비에서 총당		

⑪ 사업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운영계획 : 청사 완공후 전문인력(대전청사관리소)의 상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⑫ 사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용역 미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국민편의 제고 ○ 단독청사 건립 대비 공사비, 시설운영비 등 예산절감 효과 ○ 노후·임차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건물수명 연장 ○ 유휴 국유지 활용으로 국유재산 효율성 제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세청

8. 인천세관 청사 신축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인천세관 청사 신축 (건축)		
② 총사업비(국고)	1,270억원(국고: 1,270억원)	③ 사업기간	'24년 ~ '29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⑤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 물류환경 변화 등을 적기에 대응하고, 現청사의 과밀·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요지역 변화대응) ①現청사가 소재한 내·남항은 부두 유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인천시 등 개발계획에 의거 기능폐쇄 예정이며, ②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이 반입되는 신항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민원 불편 해소, 행정비용 절감 - (과밀·노후환경 개선) 지난 30년간 물동량 및 직원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시설·구조 안전성 확보 필요* 		
⑥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명: 청사 신축 집행실적 ○ 측정 산식: 예산집행액/예산현액×100 ○ 측정 방법: 결산보고서 검토 		
⑦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⑧ 사업규모	○ 사업물량 : 부지면적 32,507㎡, 매입방식 / 건축 연면적 24,094㎡		
⑨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주체 : 인천세관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 예산확보 및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 - 2026.~2028. : 공사 발주 및 진행 - 2029. 6. : 준공 예정
⑩ 재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정액 지원 ○ 재원분담 : 국고(예산)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국유재산관리기금)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100%(일반회계)
⑪ 사업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인천세관 ○ 운영방안 : 인천세관 기관 운영에 따른 계획
⑫ 사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접근성 개선 및 수요지역 행정지원) ○ (청사 과밀화 및 노후환경 개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경찰청

9.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신축 사업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신축 사업(공공청사)		
② 총사업비 (국고)	977억원 (국고:977억원)	③ 사업기간	24년~29년 (4단계 6년)
④ 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기관	해당사항 없음	
⑤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하고 협소한 경찰서를 신축하여 노후·협소한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안전진단 C등급('21년, 기재부), 34년 경과, 협소율 38.6%로 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사무공간이 협소 - 청사노후로 인한 배관누수* 및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 		
⑥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명: 해당사항 없음 ○ 측정 산식: ○ 측정 방법: ※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지표를 연계하여 기술 ※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⑦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근거 : - 국유기금 지침상 노후관서(30년 이상, 협소도 60%이하) 신축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 제26조의6 		
⑧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부지(13,884㎡), 이전 신축 ○ 사업물량 : 연면적 18,780.7㎡(지하2층, 지상7층)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경기남부경찰청(*국가)		
⑩ 자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정액 지원 ○ 자원분담 : 국고(전액 국고 지원)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 ○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 국유재산관리기금 순차적 지원 		
⑪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 경기남부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안 : 경기남부경찰청 및 안산단원경찰서 직접 운영 ○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 편성, 자체 시설물 유지관리 진행
⑩ 사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용역 미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협소한 경찰서 신축으로 향상된 치안서비스 제공 ○ 편의시설 확충하여 방문 민원의 편의성 제고 ○ 노후된 건물 신축으로 안전성 확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환경부

10. 인천광역시 남부권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주무부처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폐기물처리시설 (인천광역시 남부권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3,514.5억원 (국고:1,324.3 지방비: 1,986.4 특별회계: 203.8)	③ 사업기간	23년 ~27년
④ 추진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 기관		
⑤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는 2개 광역소각시설과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량의 증가, 시설의 노후화와 폐기물 발열량 증가에 따른 소각량 감소로 기존시설에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처분량이 증가하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 정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⑥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⑦ 추진경위	○ 추진근거 : -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 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사업규모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신설)		
⑨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23년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 2024년 :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 실시설계 및 인허가 - 2025년 : 착공 - 2027년 : 시설 준공
⑩ 자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 국고보조 및 지방비 조달 ○ 재원분담 : 국고 1,324.28억, 지방비 1,986.42억, 특별회계 203.80억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40%(특별회계 제외)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전 및 열 판매, 주민부담(종량제봉투), 지방비
⑪ 사업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 인천광역시 ○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
⑫ 사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시설 대보수로 장래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 - 기존 소각시설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시설의 이미지로 개선하여 주민인식 전환 - 신규시설 설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주민지원을 통한 편익제공 ○ 환경보전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최적 방지시설의 적용으로 오염부하 최소화 -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으로 온실가스 최소화 ○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소각시설의 교체설치로 열공급 및 전력생산량 극대화에 의한 경제성 확보 - 개선된 설비반영을 통한 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운영비 절감 가능 ○ 정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에너지화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자원순환기본법 등 정부정책 부합